



報 道 資 料

본 보도자료의 내용 중,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부분은
3월 23일(목) 조간부터,**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제3부 거래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부분은
3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편

- 최근의 정책적 노력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기업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 촉진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명시적·암묵적 규제의 개혁 및 철폐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본 연구는 규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과 기업 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적시하고, 공공의 후생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환경의 개선을 이루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 특히 유효한계세율, 진입규제, 사회·제도적 변수 등이 산업 또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우리 산업과 경제가 입을 손실을 보임으로써 정책입안자와 국민에게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제시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5p.

제1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설광언 KDI 선임연구위원(958-4092)

제2장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상훈 KDI 부연구위원(958-4107)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3장 선진화된 규제개혁: 기본원칙 및 방식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김일중 숭실대학교 교수(820-0553)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12p.

제11장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상훈 KDI 부연구위원(958-4107)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12장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 부패를 중심으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17p.

제4장 창업규제 현황 및 규제개혁방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707-9823)

제5장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교수(2610-4254)

제6장 고용, 해고 및 노사관계에서의 규제와 대안
김용성 KDI 연구위원(958-4071)

제7장 투자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2173-3023)

제8장 환경규제와 기업활동: 현황과 대안
홍종호 한양대학교 교수(2220-1024)

제3부 거래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28p.

제9장 거래규제: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이재형 KDI 전문연구위원(958-4180)

제10장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태중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3299-1085)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2220-1023)
성태윤 KAIST대학원 교수(958-3535)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인 활발하고 역동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왔음

- 제도적 대응으로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 추구
 -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하고 규제영향분석(RIA)을 도입하여 신설 규제를 관리하고 규제 제도의 합리화 노력
- 국민적 협의 도출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옴

□ 규제영향분석(RIA) 도입, 행정조사기본법 입법예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양적이고 가시적인 규제 개혁과 규제품질 제고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환경과 경제의 효율성도 증진된 것으로 추정

- '98년말 10,188건 ⇨ '99년말 7,123건으로 3,065건 철폐, 이후 기존 규제는 꾸준히 철폐 및 개선되었으나 신설규제의 도입으로 '05년 중반 현재 7,902개의 규제가 존재
- 중앙정부 인허가수는 '98년 2,422개 ⇨ '04년 1,700개로 현저히 감소
- 질적인 면에서도 규제 개혁의 성과 가시화
 - 예 1)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행정소요기간 179일→100일, 행정비용 150백만원→15백만원으로 감소)
 - 예 2)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기준(1만평방미터)폐지 등

□ 단순한 규제 개혁에서 규제 품질 제고 단계로 이행하는 등, 보다 성숙한 규제 관리 단계로 진입 중

- 행정절차법(1996), 행정규제기본법(1997)을 바탕으로, RIA도입, 행정조사기본법 입법예고(2005) 등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RIA실시 및 각 법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토록 요건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규제(법령)수: '02년 799(289), '03년 947(261), '04년 1,054(342)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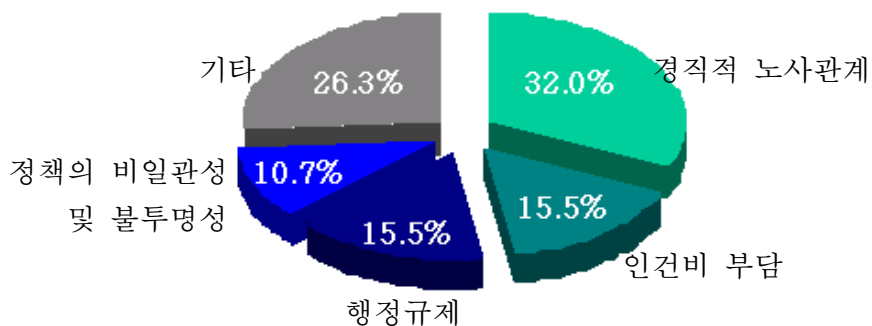
□ 이러한 정책적 대응과 체계적 노력의 결과,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대학원(IMD) 등 국제적 기관의 조사에서도 한국의 규제 개혁 성과가 현저한 것으로 평가

- 세계경제포럼(WEF, 2005)은 한국의 규제 부담이 2000년의 상위 46%에서 2004년 상위 23%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투자 애로사항으로 경직적 노사관계와 더불어 규제와 정책의 비일관성 및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고 (KDI, 2004), 기업인들의 규제 체감도도 아직 높아, 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의를 환기할 시점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구함
- 본 보고서는 특정 산업별 분석을 지양하는 대신 기업 환경의 전체적인 틀을 조감하고, 기업이 창업과 생산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엄밀하게 제시함.

<외국인 투자 애로 요인 분석>



* 자료: KDI (2004)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부분은 3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 제 I 부에서는 우리나라 규제 개혁의 역사를 회고하고 선진화된 규제개혁을 논의
 -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규제개혁의 역사와 현실을 인식하고(제1장), 선진국의 규제 개혁 논거와 정책의 시사점을 검토한 뒤(제2장), 우리가 선진화된 규제개혁을 위해 재정립하여야 하는 원칙과 방침에 대해 논의함(제3장)

제1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설 광 언 KDI 선임연구위원

경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 규제 개혁, 특히 규제와 관련된 법령개정과 일선집행기관의 규제집행 절차 및 관행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규제개혁은 집권초기의 중요 정책으로 등장하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고, 다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부 규제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되면서 규제완화가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현상이 반복
-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는 근본원인은 규제개혁 목표에 대한 혼란에서 기인
 - 원론적으로는 규제개혁의 목표를 경쟁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개혁을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 해소 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절차간소화와 기준의 완화는 중요한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강조되어 온 반면,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영역제한 등 기존 사업자에게는 타격을 주지만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핵심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는 규제개혁의 주 대상이 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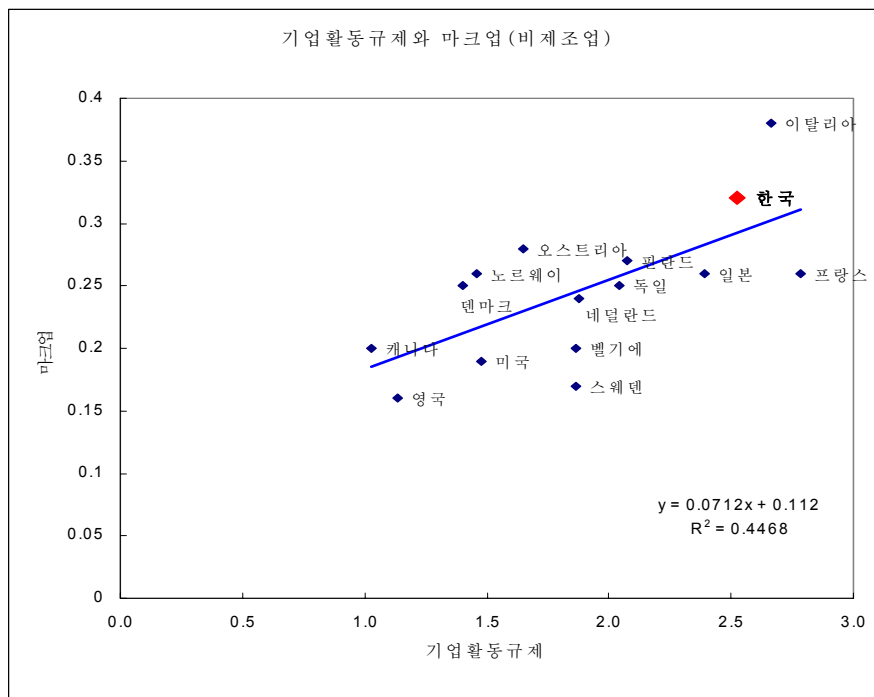
- 한편,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규제부담완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자칫하면 건전성규제를 약화시켜 최근의 신용카드회사 부실사태와 같이 시장경제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국가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
- 규제철폐 혹은 규제완화조치가 자동적으로 건전한 시장의 작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 이후에 시장경제체제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 일은 더욱 복잡하며 전문성을 필요로 함
- 흔히들 규제개혁은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신장시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돈이 안 드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개혁의 주체인 정부가 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투입해야할 시간, 인력, 조직, 예산을 간과한 것임
 -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규제개혁과정에서의 전문성부족으로 연결되어 규제개혁의 속도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은 정권의 개혁의지와 함께 규제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전문성 확보를 필요로 함
-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규제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개혁방안 마련후의 후속조치인 법령개정과 일선집행기관의 규제집행 절차 및 관행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제2장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 상 훈 KDI 부연구위원 ·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지속적인 정책과제로서 규제개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비제조업 부문의 규제개혁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선진국 규제정책의 현주소를 각종 지표와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함
 - 이를 통하여, 선진경제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들을 확인하고 우리 규제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고자 함
- OECD 회원국인 선진국의 규제개혁정책은 최근 대외개방의 중요성과 서비스 산업(특히 유통업, 전문직 서비스업, 네트워크 산업부문 등과 같은) 부문에서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 비제조업부문 기업활동규제의 정도와 이윤수준(마크업)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규제가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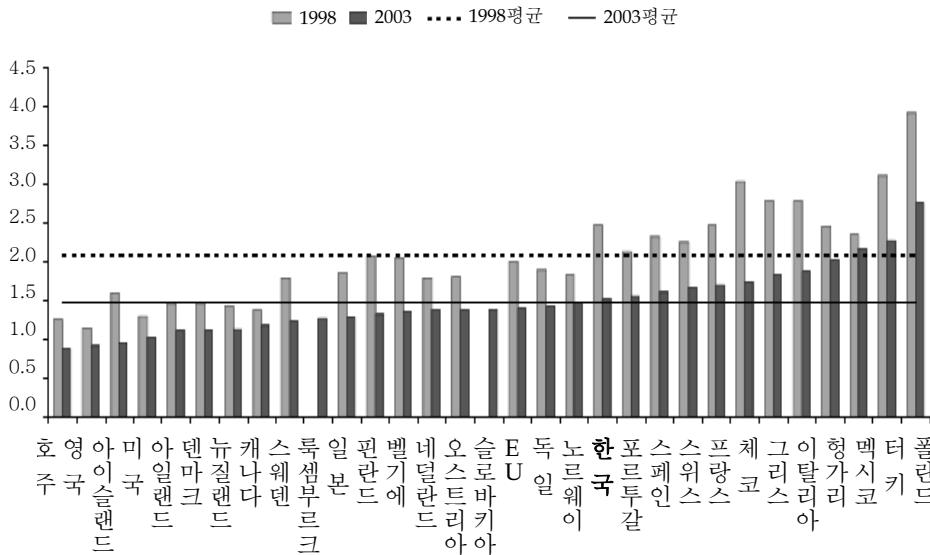


* 자료: Conway, Janod, Nocoletti(2005) 및 OECD(2005a)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 주요 사례를 통해서 선진 각국의 규제 정책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행정 부담의 경감이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음
- 반면,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전문직서비스·유통·농업 부문 등 일부 부문에서 규제개혁이 미진한 사례들도 발견됨
- 또한 경쟁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잘못 디자인된 규제개혁 정책이 적잖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들도 있었음

□ **규제지수를 통해 살펴본 선진국들의 규제 현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시사**

- 규제지수의 변화를 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현저한 개선이 있었지만, 최근(2003년)의 시점에서 비교해 보아도 규제의 정도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물 시장의 규제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의 규제지수는 2.5에서 1.5로 빠르게 하락(최소규제지수는 0, 최대규제지수는 6)



* 자료: Conway et al. (2005)

-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특히 비제조업 부문에서 규제의 경쟁 저해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부문 중에서도 기술 특성상 분절생산 고기술 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에서는 규제의 경쟁 저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부의 직접규제와 같은 강한 형태 규제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규제개혁정책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제로서의 의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의 압력을 덜 받아온 비제조업 및 고기술 제조업 부문에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제3장 선진화된 규제개혁 : 기본원칙 및 방식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김 일 중 숭실대학교 교수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적절히 조합하여 최적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본 장에서는 한층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들을 재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반영되어야 할 규제개혁의 실제적 지침들을 제시
 - 선진화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었던 규제개혁에 관한 편견 내지는 오해들을 교정해야 함
 - 대표적 예: “규제개혁은 단순히 기업의 모든 고충을 해결하는 작업이다”, “규제개혁은 그저 규제를 폐기시키는 작업이다”, “경제규제는 폐기해야 하지만, 사회규제는 강화해야한다”, “규제개혁효과와 시장결과 사이의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인과관계에 대한 오해” 등
 - 나아가 어떤 정부규제이든 민간부문 각종 재산권들과 갖게 되는 필연적인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표사례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선진화된 규제개혁 작업은 바로 이러한 민간재산권의 보호 및 국가의 규제수용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 즉 헌정주의적 기초에 반드시 근거해야 함
 - 이제까지는 주로 행정부 주도로 규제개혁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정부 3부 전체, 즉 입법부와 사법부의 참여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
-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들 중 우리의 인식전환이 특별히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선진화된 규제방식”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고려할 시점
- 궁극적으로, “규제개혁=개혁적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메시지를 정책입안가 및 규제개혁종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함
 - 특정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부과하는 통제방식은 다양하고 또한 다중적일 수 있다는 그간 법경제학적 이론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부명제들을 도출
 - a) 대분하여, 현재 대부분의 행정규제들이 속하는 “사전(ex-ante)규제”와 손해배상으로 대표되는 “사후(ex-post)규제”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 b) 어느 하나만의 배타적 사용이 사회최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 c) 오히려 두 통제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최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 d) 바로 이것이 선진화된 규제개혁 작업의 큰 축이 되어야 함
- “규제개혁=개혁적 규제” 등식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전규제들의 상당수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사후규제와 병용하는 것이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핵심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제Ⅳ부에서는 규제 개혁의 선결 작업으로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인 실증분석으로 제시
 - 제11장은 우리나라의 명시적 진입규제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별 규제의 정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제12장에서는 명시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면에서는 규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회·제도적 변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

제11장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 상 훈 KDI 부연구위원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진입 규제는 해당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성장이 저해된 것으로 밝혀져, 규제의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함을 시사

-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규제의 개혁이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산업별 분석에서는 1999~2002년의 4년간 자료를 활용, 진입 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해당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임
 - 진입 규제의 종류를 강한 규제(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와 약한 규제(신고, 등록)로 나누어 각 산업의 하위 산업 중 각각의 규제가 가해지는 비중과 규제가 가해지는 산업의 산출액을 구하여 이러한 진입 규제가, 사업체수, 출하액비율, 고용비율 등으로 측정된 기업의 시장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진입률은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을수록,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즉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신규사업체의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

-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진입률과 고용을 기준으로 한 진입률은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존재할 때 감소

* 즉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에 의한 출하액 또는 고용의 비율이 감소

- 그러나 신고·등록 등의 약한 형태의 규제가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

○ 결론적으로,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는 다양하게 측정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규제는 아니지만 높은 자본집약도 역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함이 밝혀짐

○ 또한 산업내의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 발전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진입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결국 진입규제에 의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우 산업의 성장이 더뎠다는 것을 보임

-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 전체의 성장률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진입률에 의해 양(+)의 영향을 받음

- 결국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는 신규 사업체의 해당 산업 진입을 억제하고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

□ 같은 기간(1999~2002) 동안 IMD의 자료를 활용, 42개국의 법규제 지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밝혀짐

○ 분석기간 중 우리 나라의 평균 법규제지수는 평균 규제지수 6.1에 미치지 못하는 4.7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우리 나라가 동 기간 중 IMD의 42개국 평균 규제지수인 6.1 정도로 법규제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연평균 약 0.5%p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사업체들이 법규제 등이 존재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법규제가 없는 경제의 성장률보다는 어느 정도의 체감규제가 존재하는 경제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 규제가 전혀 없는 경우보다 양질의 규제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경제성장을 위해 더 효과적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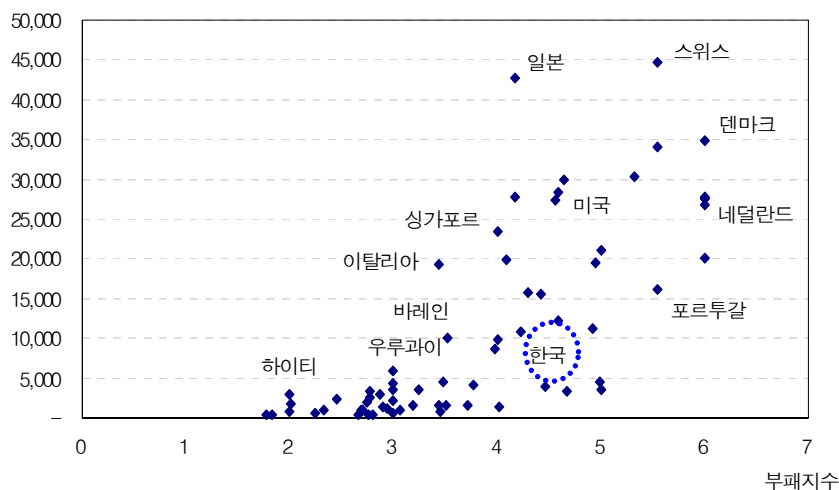
제12장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 : 부패를 중심으로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1990년대 우리 경제는 OECD국가의 평균보다 부패 수준이 높아, 우리가 OECD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부패를 지녔을 가상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연평균 약 0.72~0.83%p 내외의 성장 손실을 경험

- 본 연구는 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암묵적으로 규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의 주요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론적·실증적 분석에서는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된 부패법과 질서의 준수 등을 대표적 변수로 선택, 활용함
 - 제도적인 변수나 사회적 관습은 경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진입이나 조업에 있어 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부패 등 사회 관습과 제도는 국민소득수준 또는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일인당 국민소득



* 자료: Political Risk Service Group (2004), World Bank (2004).

□ 이론적으로 부패의 존재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왜곡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 소비경로도 왜곡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됨

- 제도적 변수,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사용한 부패의 존재로 인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경제 전체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에서는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조업 동기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부패 등에 의한 암묵적 진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과 이로부터 기업이 얻는 대가는 경제의 소비 패턴까지 변화시키며, 특히 생산에 있어서는 자본의 점유율이 노동의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에 따른 성장손실이 개도국보다 큼
 - 즉 우리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패의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약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왜곡과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

□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활용, 1991~2000년간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67개국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패수준은 경제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부패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도 비율에 맞춰 일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님
 - 부패수준이 높지 않은 경제의 경우 부패가 척결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증가하지만,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 그룹에서는 부패가 감소하며 평균 경제성장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따라서는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패가 척결되면서(부패지수가 변화하면서) 경제 성장이 오히려 한동안 둔화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낮은 부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
 -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가 어느 정도 척결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패의 추가적인 척결에 따라 경제 성장이 제고될 것으로 추정

□ **부패와 더불어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도 경제성장에 관계를 미침**

- 관료제 질의 개선, 법과 질서의 준수 등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 경우 그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음
 - 민주주의가 미숙한 국가 그룹에서는 민주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성장이 지체되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룹은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며 성장율이 증가하는 모습 발견

□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경제가 사회·제도적 변수(특히 부패)의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1990년대의 10년간 약 0.72~0.83%p 정도의 추가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이 결과는 국내투자, 해외투자, 개방의 정도, 교육수준, 초기 국민소득 등의 주요 변수를 제어한 상태에서 얻어진 수치임

